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집중 육성이라는 의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교협은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3년 2월 18일 동양대학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과제"라는 주제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발표를 하고, 이어서 △ 지방대학 육성 심포지엄 -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 인재 상호 육성 시스템을 중심으로(두재균 전 북대 총장), △ 대학입학정원 감축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방대학 위기해소 방안(부구욱 영산대 총장), △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방향(성기태 충주대 총장), △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 육성방안(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 △ 지방 전문대학 육성방안(정태용 대천대 학장), △ 지방대학 위기 : 현실, 진단, 대응(김태일 영남대 교수), △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전국집행위원), △ 지방대학, 반드시 살려야 한다(이태수 매일신문 논설위원), △ 새 정부 지방대학육성 정책방향의 모색(정영섭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대표) 등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 중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의 지정토론 원고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방대학 육성 과제

박 찬 석 | 전 경북대 총장

I. 지방대학 왜 살려야 하는가?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취업이 잘 안 되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학생들은 서울로 진학을 희망한다. 그러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학생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하면 대학의 정원을 풀어주어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은 도태되도록 하면 될 것이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경쟁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것은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엄청난 자본을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축은 대학이다. 지식정보화로 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국가운명을 대학에 두고 있다. 좋은 대학이 있는 나라치고 후진국이 없고, 선진국치고 후진 대학이 있는 나라도 없다. 이것은 대학과 사회가 하나가 되고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원동력이 대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산업은 거

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있는 것도 대학의 인재와 연구에 있는 것이고, 선진국의 대명사로 인정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발전이 바로 대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대학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이 중앙의 대학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하여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의 엄청난 성장의 진원지도 바로 서울의 대학이다. 인재가 서울로 집중하고, 서울에 집중된 인재가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누적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였고 시행하였다. 지난 40년간 60조 원 가량 지방에 투자를 하였지만, 지방의 인구는 떠나고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을 낳았다. 그 투자 방향은 지방의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원이 지방을 떠나면서도 지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세계의 선진국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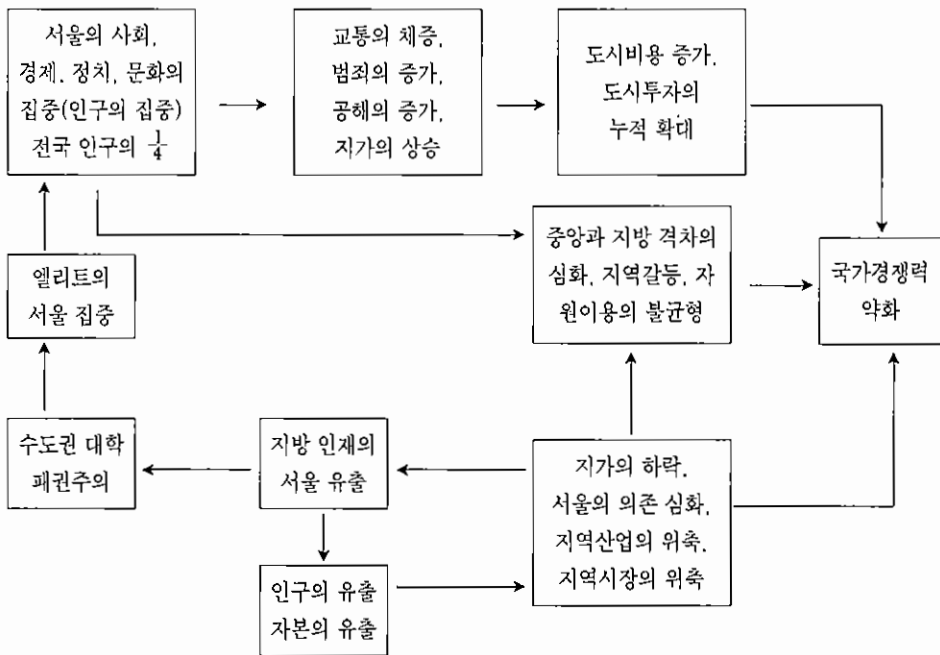
고 국토의 균형개발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II.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지방은 해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중앙은 과밀로 치달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과(因果)를 만들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고등교육에 있다.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했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였으므로 모든 권력이 한양으로부터 나왔고, 지방은 그 신민(臣民)의 삶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양을 통하여 출세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갔고, 그런 관행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한양에 인구의 집중을 가져오지는 않았

다. 경제의 기반이 모두 지방의 토지자산에 있었고, 한양에서 한정된 토지로 과대한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오부(京五部)의 인구는 당시 약 20만(전국 인구 700만, 2.7%)에 불과하였다. 농업시대에는 가구당 1ha 정도의 땅으로 한 가구를 부양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산업사회에서는 1ha 땅으로 300명의 사람을 부양할 수가 있다. 배후지 농토의 크기와 교통수단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가 결정되었던 농업사회와는 달리, 산업사회에서는 쉽게 수십만, 수백만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

산업사회에서의 공장제 생산은 도시를 수십만의 도시에서 수백만의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고, 때로는 수천만의 도시로 키울 수 있는 것도 도시 내부 깊숙이 농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단위토지면적당 제조업의 생산이 농업생산에 비하여 수십 배, 수백 배로 증가하였기 때



〈지역인재의 유출이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순환도〉

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인구의 밀도가 높았던 농촌은 스스로 농촌, 즉 지방을 버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공장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인구증가 요인을 제한하였다. 대학생의 정원도 통제를 하고, 공장의 건설도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증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미 그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가 서울로 간다고 해서 서울의 인구는 증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인재가 집중되면 스스로 직업을 창출한다. '피란민만 모여도 인구만 모이면 직업은 스스로 창출된다.' 살기 위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 우수한 인재가 서울에 집중을 하면 인재는 서울의 권력을 독점하고, 또 권력을 가진 인재는 서울에서 직업을 창출하므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이 성장을 지속하면 서울이 만든 큰 빵을 나누어 먹으면 될 일이지 서울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서울의 과도한 집중이다. 서울은 이미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성장의 거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자원을 소모하고 살아가는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에서 도시집중은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그 집중이 과도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둔화시킨다면, 그 도시의 크기와 집중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 여러 가지 집적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집적의 이익이 한계를 벗어나면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서울의 지가는 지방 대도시의 3배로서 도쿄, 프랑크푸르트 다음으로 높다. 외국인이 서울에서 내는 50평 아파트의 월세는 4천 달러나 된다고 한다. 가장 생활비가 비싸다

는 이웃 도쿄와 맞먹고, 베이징의 4배이다.

둘째, 재해의 문제이다. 자연재해나 전쟁은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은 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그런 재앙은 각오를 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홍수나 설해만 아니라 지진도 예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한 도시의 폐허가 국가 전체로 볼 때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 과소의 문제이다. 서울의 과밀의 문제는 지방의 과소의 문제를 수반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지난 40년간 43조 원을 투자했지만 인구는 1/3로 줄었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지방 대도시의 인구감소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지방의 폐쇄는 서울의 과밀을 더욱 부채질한다. 지방은행은 지방에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한다. 은행이 시장원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안전하게 대출할 수 있는 서울에 투자해야 하고, 우수한 인재도 모두 서울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국가경영은 시장원리만으로 할 수가 없다.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은 독점을 낳고, 독점은 결국 공간적으로 볼 때에는 서울만 비대하게 하는, 국가 전체로는 병리적 요인이 되어 왔다. 정책이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 배분에 있다. 인적·물적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고갈되고, 지방의 고갈은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서울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Ⅲ. 어떻게 하면 지방대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국가 발전에 지역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는 나무를 키우는 데 뿌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무의 꽃을 보는 데 관심이 있고, 뿌리를 보지 않으려 한다.

1) 지역인재 할당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자격시험을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할당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의 인구는 510만이고, 우리 나라 인구의 13%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뽑으라고 할 때 대구/경북 지역 대학졸업자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3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서울로 가려는 많은 학생은 지방대학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학을 가는 개인적 이유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이 선망하는 좋은 자격증이 지방대학에 부여되면 우수 학생이 지방에 남아 있게 된다. 그들이 바로 21세기의 지방의 인적자원이다.

지방대학에 자격시험을 할당하면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 지방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교육대학생의 질이 중앙에 비하여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졸업 후에 자격증을 갖거나 임용되기 때문이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서울의 집중 원인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집중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지방의 인재가 떠나는 것은 대학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농촌 인구가 급감한 것은 농촌에 소득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학교육 기회의 상실 때문이다.

2) 지방대의 재정지원

지역의 발전은 인재와 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인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 발전의 변수는 재원(財源)이다. 자금과 인재 간에는 서로가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순환의 논리를 먼저 인재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의 경제가 어려워지니 정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자금을 방출한다고 한다. 지방의 대도시에 주택이 없는가? 단독가구를 합하면 주택 보급률이 85%를 상회하고 있고, 도시의 단독주택은 미국처럼 1가구 1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2가구, 3가구용 공동주택의 형태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도시의 주택도 남아도는 형편이다. 그리고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터널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교통의 문제를 도로의 확장 등의 공급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줄여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의 어디에 투자하여야 하는가? 지방대학에 투자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고 이를 주체하는 기관이 대학이다. 대학의 실험실과 실업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재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산업과 연계를 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대학의 연구가 생산으로 연결되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엄청난 잠재 실업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실업자들에게 실험실에 머물게 하여 연구하게끔 자금을 지원하면, 건설에 의한 방편보다는 더 장래성이 있고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3) 밀레니엄 상(Millennium Award)

직역하면 '천년의 상'이지만, 의역을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뜻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부가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젊은이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한 영국의 사례이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를 창출

하는 사회이고, 정보와 지식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백방의 정책을 강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없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중요하다고 했을까?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고, 정보와 지식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실천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지방문제의 인식 차원은 정확하다. 이제 지방대학이 지식산업을 담아낼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4) 대통령의 의지

김대중 대통령은 인재지역활당제,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정책의 실행 의지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인재지역활당제를 실시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선거용이었고, 지방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대통령, 정부, 국회가 지방의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 정부, 국회가 하나의 체계를 갖게 될 때 가능한 일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아와서 국민과의 토론을 했다.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다. 기조연설에서 ‘지방대학만’이라고 강조를 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확고한 의지가 가시화 될 것을 믿고 지지를 해야 할 일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내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지방이 살기 좋아지면 서울에 갈 필요가 없고, 서울에 인구증가가 둔화되면 주택수요도 줄어져 주택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붓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국가 전체는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있고, 종국적으로 대학교육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이다.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의 대학을 보내야 하는 것이 민족적 전통이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방 아파트값의 3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연간 15만 명씩 불어나고 있다. 서울의 인구증가의 원인은 무엇이고, 수도권의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문명**